# 한국 대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도전

## 김윤덕 국토부장관, 캐나다 몬트리올 개최 ICAO 42차 총회 참석… 9연임 도전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42차 총회에 참석해 ICAO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해 올해로 가입 73주년을 맞고 있다.

ICAO 이사회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되는 36개국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은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후 8번의 연임을 통해 25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정책 수립과 개도국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해 국제항공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온 바 있다.

ICAO는 항공기 안전, 기내 수하물, 공항시설, 출입국 보안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마련에 직접 개입하는 핵심 국제기구인 만큼 이사국의 지위는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ICAO 이사국 9연임을 통한 국제항공사회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이번 총회 기간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23일 총회 개막일부터 살바토레 샤키타노(Mr.Salvatore Sciacchitano) 이사회 의장 및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Mr.Juan Carlos Salazar) 사무총장 등 ICAO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의 위상과 ICAO의 비전·전략과 관련한 유무형의 기여 노력 등을 소개하며 이사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국 선거와 관련한 지역별 여론을 형성하는 지역민항위(아프리카, 중남미 등)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주요국 교통장관들과도 만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대(對) ICAO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등 지역의 항공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각국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도 적극 참여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한민국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이사국 9연임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 "끝없는 소모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로 마침표 찍어야"

## 민주 이성윤 의원 "올바른 정보 바탕, 투표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완산을)이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화된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주민투표로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민, 전주시민, 완주군민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안이 바로 이 통합 문제라며,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로 시작되었고,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의결까지 있었지만, 현재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만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시민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와 완주군의 '시민을 위한 행정'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듯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통합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완주군 주민투표가 신속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현재의 혼란과 고통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와 전주 모두 같은 도민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실시한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여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을 호소했다.

현재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활동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통합 주장 측은 전주와 완주의 경계선에서 매일 아침 피켓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성도경 비나텍 대표는 직접 완주군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이에 질세라 통합 반대 측 또한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 일원과 전주에서 피켓과 머리띠까지 동원하며 통합 반대 주장을 펼치는 등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첨예한 갈등으로 주민들 간의 지루한 소모전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더 이상 통합 논의가 표류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만호 기자

# "소멸 위기 임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살린다"

## 농어촌기본소득 임실 추진연대 "생존 위한 긴급 대책" 등 강조 경제 선순환·청년 정착 유도

한득수 농어촌 기본소득 임실군 선정 추진연대 상임대표를 포함한 추진연대 회원들이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임실군을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임실군 선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려 화제다.

농어촌 기본소득 임실군 선정 추진연대(상임대표 한득수) 소속 회원 10여 명은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임실군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임실군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연대는 임실군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자립경제력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5,000명 이상, 즉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꼴로 지역을 떠났고, 일부 마을에서는 식당, 미용실 등 생활 필수 서비스마저 사라져 주민들의 기본 편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농지와 산림이 대부분인 임실군은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어려워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며, 최근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면서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국 평균(19.2%)의 두 배가 넘는 42%에 달해 공동체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추진연대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재건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생존을 위한 긴급 대책이자 주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 주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해 작은 상점과 시장을 되살려 경제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전남 신안군의 성공 사례처럼 임실군도 이러한 성과를 재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체 시설을 활성화하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득수 상임대표는 "임실군의 위기는 전국 농어촌의 축소판"이라며, 시범사업 선정이 '지역 재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지속적인 후속 운동을 예고했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 내란청산 등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민주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삶 속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2025년 국정감사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 "시대의 양심, 산민의 숭고한 정신 계승"

## 30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고 한승헌 변호사 3주기 '산민포럼' 출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산민(山民)' 故 한승헌 변호사(1934~2022)의 3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산민포럼'이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공식 발족한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그의 위대한 가치를 오늘에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 진안 출신인 故 한승헌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 변론에 참여하며 '1세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데 헌신했으며, 1998년에는 감사원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청렴과 개혁을 실천한 '시대의 양심'으로 평가받는다.

산민포럼 준비위원회는 "한승헌 선생의 삶과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며, "이를 기리는 것을 넘어, 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확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발족식에서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와 김인회 감사위원의 발표를 통해 한승헌 변호사의 한국 현대사 속 의미와 법률 개혁가로서의 업적이 깊이 있게 조명된다.

이어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억하고 그의 따뜻한 면모를 공유하는 '이야기마당'도 마련된다.

산민포럼은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정세균 전 총리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발족식에는 법조계,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산민 정신'의 계승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포럼 관계자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불의에 맞섰던 한승헌 변호사의 용기와 신념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되살려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산민'의 정신이 미래 세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 군산시의회, 군산항 명칭 위치 반영 건의안 애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2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 중에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군산항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송부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해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통합 항만명을 '새만금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올해 개항 126주년을 맞은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미 지난 7월 9일에도 군산항 명칭 보존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한 바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할 것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 △새만금항 위치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상의 위치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민주 박희승 의원 "장수군 농촌공간정비 대상지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전북 장수군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촌 활성화와 특산품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으로 구성된다.

장수군은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지구 지정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수 IC 인근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특산품 가공·체험·판매를 아우르는 관광 거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농촌 현실 외면한 기계설비 규제, 개선 시급"

## 민주 윤준병 의원, 송옥주·문대림 의원과 국회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 현실과 괴리된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데, 이 기준이 축산 및 농업용 건축물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공동주최(송옥주·문대림 의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한 토론회에서 "내년 4월부터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지만, 규모는 커도 실제 기계설비가 최소한으로 설치된 대형 축사나 농업용 건축물에도 일괄 적용되어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은 물론,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및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송준익 연암대학교 교수는 "축산시설은 대규모 건축물이라도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제한적이다. 일률적인 선임 의무는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설수호 고바우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 사무국장)는 더욱 강력하게 "기존 다수의 법령으로도 관리 중임에도 추가적인 경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며, 외부 인력 출입으로 전염병 유입 위험까지 커진다"며, "따라서 축산시설은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모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입법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풀어내고,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농업 분야 규제 합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